

현실 학회, 학회 현실에 대한 성찰적 소환장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방송영상과 교수

이 글은 성향변화, 체질개선의 희망을 찾으려는 용기 있는 학회지의 진지한 요청에 대한 응답지다. 이 글을 통해 연구자는 자신이 속한 언론·미디어·정보·커뮤니케이션학 유관 학회의 역사적 존재양식과 실재적 운영 체계를, 명백히 사적인 생각과 주관적인 판단, 단편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일종의 비평적 에세이 스타일로 정리해 볼 것이다. 여러 학회 중에서도 하필이면 특정 학회가 언급될 수 있겠는데, 이는 단지 실례를 들고자 하는 편의에 따른 것일 뿐이다. 예외가 아닌 상례의 제시다.

이 글은 체계적인 분석보고서나 실증적인 조사연구서가 결코 아니다. 신뢰성을 갖추거나 타당성이 확인된 학술논문을 표방하지 않는다. 개인적 참여자·관찰자·비판자의 관점에서 본인이 발견한 문제를 문제의식으로 발전시켜, 공개적인 논의를 시작해보려는 발문으로서 준비된 것일 뿐이다. 특수한 관점이 뚜렷하게, 특별한 측면이 집중적으로 노출될 것이다. 학회라는 현실적 주제에 관해 작성된 일종의 에세이이며, 학회를 문제적 현실로 되돌아 본 사적이고 방성적인 감상문이 될 수도 있다. 주관적 리포트다.

논문 발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외부 후원 프로젝트들로 사실상 세미나·심포지엄이 채워지고 있는 현실, 외부후원금을 갖고 호텔을 출입하는 현실, 그런 후원금들로 운영예산의 대부분이 충족되고 있는 현실이 중점적으로 부각될 것이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를 암울한 부당한 정치·권력과 부정하게 사교하면서, 저널리즘의 죽음과 저널리스트들의 축출, 민

* jeongyuchan@gmail.com

주 · 정치적 광장의 폐쇄 현실에 관해 침묵해 온 부정의 역사가 시비된다. 자율적 학문공동체로서의 기본윤리를 되찾기 위한 성찰의 포인트들이다.

키워드: 학회, 권력, 공론장, 성찰, 글쓰기

1. 들어가며: ‘학회란 무엇인가’라는 성찰적 질문

나는 지금까지 자신이 속한 언론·정보·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유관 학회에 관해, 개인적인 차원에서, 꽤 많은 유감을 가져왔고 자주 불만을 토로해 왔다. 그런 개별적 수준의 비판은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도 드물거나 낯선 일이 아닐 것이다. 학회에 대한 비난은 실제로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일종의 공통체험이다. 문제는 학자로서, 학회라는 장에 관해, 공개적으로 논의해 본 바가 거의 없고 진지하게 토론해 본 적이 매우 드물다는 사실이다. 유관 학회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중복 가입된 회원 수가 크게 늘어나며, 그런 제도화 과정을 거치면서 학회의 운영·활동 방식과 그 내외부적 영향력, 효과성에 관해 짚어볼 여러 측면들이 노출되는 상황에서도 그러하다. ‘학회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 ‘우리에게 학회란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야 하는가?’하는 래디컬(radical)¹⁾ 한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다.

사실 나는 다른 많은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관습대로 학회에 가입해 있었고, 또한 습관처럼 회원으로서 이런저런 학회활동을 했다. 학회는 그렇듯 내가 의식하기 이전에 일정한 관습의 현장으로 작동하고, 당연시된 습관의 제도로서 존재했다. 객관적인 규칙을 쫓거나 주관적인 계산에 의거하지 않은, 관례에 따라 활동이 전개되고 습관적으로 행동이 이루어지는 일종의 장이었다. 부르디외(P. Bourdieu)가 말하는, 역사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면서(constructed) 회원들의 행위패턴을 구조화하는(constitutive) 특정한 아비투스(habitus)를 갖춘 특별한 장이었다. 그리고 학회라는 현실의 특수한 장을 구성하는 아비투스, 즉 ‘지속적이며 전이 가능한 성향 체계’(system of durable, transposable dispositi-

1) 여기서 ‘래디컬’이란 마르크스가 자신의 에세이 『헤겔 법철학 비판』에서 썼던, 그 원래적 의미에서의 ‘radical’이다. 즉, 현상의 표면 아래로 내려가, 사태와 사안의 근본을 파져보고 기저에서부터 사건을 발본색원(拔本塞源) 해 보고자 하는 철학적 태도, 사유의 신념을 뜻한다.

on)는 무엇보다 학회에 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거나 토론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Borudieu, 1990, pp. 53).

현실의 학회에서 작동되고 학회의 현실을 구동시키는 ‘실천의 논리’는 의외로 간단하다. 회원자격을 갖추고 학회의 시스템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빠지는 것이다. 학회라는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의나 공개적인 비판은, 그 어떤 강제적 억압의 과정·외형적 검열의 기제가 없이도 습관적으로 관례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물론 일회적인 시비가 가능하고, 개인적인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학회라는 장의 구조화된 배열·배치의 조건 속에서, 자신이 속한 학회의 체질과 체계에 대한 성찰과 비판은 습관적으로 익숙하지 않다. 관례적으로 어색한 일이다.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조밀한 학연으로 직조되어 있고 공고한 선후배 관계로 서열화된 학회라는 권력관계 속에서, 공고한 습속의 탈피는 즉각 위반으로 간주되고 일탈로 인식된다.

성향체계는 그에 대한 위협의 요소에 대한 징계를 내포한다. 문제의식이 뚜렷한 신진학자들조차 비판적 목소리를 잘 내지 못하는 이유다. 학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학회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며 그럼으로써 학연을 지속시키고 업적을 쌓기 위해서는 개인으로서 어쩔 수 없는 구조화된 문제에 관해서는 입을 다무는 게 상책이다. 실리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지다. 문제가 있다고 여기지만 공개적인 발설은 아끼는 것, 사실 그게 바로 내가 구사해 온 학자적 세계 생존의 기술이었다. 개인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는, 체질화된 습성이었다. 침묵을 지키고 공론을 기피하는 성향이 이러한 은밀한 훈육과 처벌의 조건 속에서 자연스럽게 강화되고 재생산된다. 자신에 대한 진단적 담론과 공개적 토론을 회피하는 문화, 바로 이게 현실의 학회, 학회의 현실이 지닌 결정적이고 지배적인 성향의 체계다.

그리고 이런 침묵의 정서구조는 결국 학회의 존재 조건에 대한 철학의 빈곤, 윤리의식의 마비 상황으로 이어진다. 학회 내부의 충분히 문제제기가 가능하고 교정이 필요한 습성을 ‘이성의 공적활용’이라는 계

몽의 빛으로부터 은폐시키는 차단효과가 빚어진다. ‘계몽이란 무엇인가?’라는 칸트의 질문에 비판적인 태도와 성찰적인 양식으로 대답한 푸코(M. Foucault)의 생각에 비춰보면, 침묵이 구조화되고 방조가 습성화된 지금의 학회는 명백히 반계몽적이다(Rainnow, 1984).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내부적으로 고민의 목소리들이 많고 실체적 변환의 여론이 높다는 것이다. 비판과 성찰의 이야기들이 잔존해 여전히 희망적일 수 있다. 그리고 이 불만과 반성의 속삭임들은 이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가능한 위반의 형태를 띤 실천적 비평”²⁾을 요구하는 공개적이고 집단적인 의견의 표출로 나타나고 있다.

이 글은 성향변화, 체질개선의 희망을 찾으려는 용기 있는 학회지의 진지한 요청에 대한 응답지다. 나는 이제 내가 속한 언론·미디어·정보·커뮤니케이션학 유관 학회의 역사적 존재양식과 실재적 운영 체계를, 명백히 사적인 생각과 주관적인 판단, 단편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일종의 비평적 에세이³⁾ 스타일로 정리해 볼 것이다. 여러 학회 중에서도 하필이면 특정 학회가 언급될 수 있겠는데, 이는 단지 실례를 들고자 하는 편의에 따른 것일 뿐이다. 이 글은 체계적인 분석보고서나 실

2) 같은 책, 45쪽.

3) 최근 언론유관학계에서도 흥미롭고 유의미한 에세이적인 글쓰기가 시도되고 있다. 과도하게 정형화된 논문적 글쓰기의 코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형식적 실험을 통해 ‘논문’의 틀로 수렴될 수 없는 사유의 진폭을 확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실험이며, 본인도 이에 적극 참여 중이다. 자신을 드러내는 자기반영적 글쓰기, 허구(fiction)적인 요소를 과감하게 노출시키는 문예적·문학적 글쓰기, 벤야민의 말대로 기밀하게 사태에 응대하기 위한 칼럼 등의 저널리즘적 글쓰기 등이 모두 이 노력에 포함될 수 있다. 자칫 논문 글쓰기의 엄밀성을 파괴한다는 우려도 있고 진지함을 결여한 가벼운 톤의 한계를 갖는다는 지적도 있지만, 본인은 이를 지적이고 성찰적이며 철학적인 사유를 배태한 에세이적 글쓰기의 기본적 한계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형식주의적 과도성에 의해 유의미한 사유들이 구조적으로 삭제되고 그럼으로써 내용적 표피성을 드러내는 논문 글쓰기와 경합할 수 있는 또 다른 학술적 글쓰기 양식으로서, 학문의 실천과 학술의 활동을 더욱 풍요롭고 다채롭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논문 글쓰기에 대한 엄격한 질적 판단이 에세이 글쓰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됨은 물론이다.

증적인 조사연구서가 결코 아니다. 신뢰성을 갖추거나 타당성이 확인된 학술논문을 표방하지 않는다. 개인적 참여자·관찰자·비판자의 관점에서, 본인이 발견한 문제를 문제의식으로 발전시켜, 공개적인 논의를 시작해 보려는 발문으로서 준비된 글일 뿐이다. 특수한 관점이 뚜렷하게, 특별한 측면이 집중적으로 노출될 것이다.⁴⁾

학회라는 의외의 대상에 관해 작성된 일종의 에세이이며, 학회를 문제적 현실로 되돌아 본 사적인 감상문이 될 수도 있다. 주관적 리포트다. 말했듯이, 이 글에서 나는 학회 일반에 대한 총괄적 분석이나 특정 학회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시도하지 않는다. 당연히 많은 측면들이 생략된다. 나는 이 글에서, 학회의 현실과 그에 관련된 문제를 몇 가지 단면으로 베어내 들여다 볼 것인데, 그 해부의 타당성은 결국 공개적 토론과 지속적 논의를 통해 판명될 것이다. 나는 이런 위반적인 글쓰기로써 이번 특집호를 기획한 동료 학자들이 끌어안은 고민, 즉 자신의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학회의 체질을 성찰적 논의로서 바꾸고자 하는 기획에 보다 정직하게 응답하고자 한다. 문제는 특정한 관점에서 제기되는 것이며, 해답은 결국 (간)주관적인 공론을 통해 도출될 것이다.

4) 그러한 점에서 이 글은 기존 논문 글쓰기가 지향하는 ‘객관성’이나 ‘중립성’ 혹은 ‘보편주의’의 기준을 분명하게 지양한다. 그로부터 확실하게 거리를 둔다. 대신에 문제적 사유 제출의 ‘특이성’(the singularity)의 포지션(position)을 정확하게 택함으로써, 분리와 거리를 학술(적 글쓰기)의 장 내에서 이뤄낸다. 이견의 흐름을 발생시키고 논란의 공간을 생성시키고자 하는 전략적 스탠스(stance)라고 할 수도 있다. 매우 정치적인 입장 선택이다. 이와 같은 독특한 사유의 개진은 그리하여 일종의 소란과 불편을 야기하며, 내부의 간극과 차이를 확인시켜주는 즉각적 효과를 낳는다. 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돌발적 사건으로 인해 오히려 공통성의 발견이라는 가능성이 짹틀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 글에서 표현된 것도, 나(만)의 특이한 생각으로서 시작되나, 이후의 대화와 지속적 토론의 과정을 거치면서 공통의 체험으로 확인되고 공통의 의식으로 공유되며 공통의 감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말 그대로의, 일파만파적 효과성이다. 이러한 점에서 “외면상 주관적이거나 돌출적인 논의와 자전적인 입장의 토로가 발휘하고 매개해낼 수 있는 역할과 의의”는 매우 중요할 수 있으며, 바로 그 가능성을 강조함으로써 본인이 택한 글쓰기(전략)의 시도를 적극 성원한 심사위원에게 지면을 통해 감사를 드리는 바다.

2. 학회라는 공론장, 그 철학적 빈곤상태

일반이 쉽게 동의할 수 있는 뜻에서, 그리고 사전적인 의미에서 학회는, ‘학문을 깊이 연구하고 더욱 발전하게 하기 위하여 공부하는 사람들이 만든 모임’을 의미한다.⁵⁾ 그 의미 구성의 요소들을 좀더 세부적으로 정리해 보면 학회란 학문(學問)에 발을 들인 학자(學者)와 연구자들이 지적인 교류와 동류적인 유대를 위해 구성한 일정한 자격 요건과 책임 윤리에 기초하는,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회합으로서 규정될 수 있다. 개인적인 수준은 물론이고 집단적인 차원에서, 특정 학문의 심화·발전·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성이 뚜렷하고 공통의 의지가 분명한 학술 활동들의 ‘집체’(collective embodiment)이다. 학자 간 지식의 교류와 지성적 교제의 매개체로서 그 고유한 자격과 가치를 주변으로부터 승인 받은 일종의 독자적인 장(champ), 공적인 도메인이다.

아렌트(H. Arendt, 1958)는 ‘공적인’(public)이라는 말을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두 가지 의미로써 쓴다. 첫째,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공개적 출현’(public appearance)이다. 두 번째는 사적으로 위치하지 않은, ‘우리’ 모두의 공통된 세계 자체를 뜻한다. 그리하여 그녀가 말하는 ‘공적 영역’(the public realm)이라 함은, 개별화된 ‘우리’를 서로 관여·매개·회집시키는 사이·중간의 공통세계를 가리키며, 그 세계는 무엇보다도 개별적 주체들의 공개적 참여와 개방된 공론화의 활동을 통해 직조된다. 학회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학자라는 다원적 복수성들의 공개적 출현이 가능하고 또한 그로써 이루어지는 장이다. 자신의 지적·이론적 자산을 최대한 타자와 공유코자 공개적 출현의 활동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학자들에 의해 구성되는 지식의 공통 세계, 학술적 공적영역이다.

학회라는 것은 그렇게 구성되는 실천적 과정이자 결과이다. 그 내용

5) 포털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인용.

적 성격과 형식적 특징에 있어, 무엇보다 학술적인 토론의 지속적 전개와 이를 위한 장내 성원들의 진지한 노력과 책임 있는 참여를 핵심으로 하는 학자들의 공통세계다. 논문 발표로 시작되고 그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재생산되는 학문의 공적영역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⁶⁾ 다른 직능단체, 재단회합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물론 여기서 ‘논문’은, 현재 학회가 발행하고 있고 또한 회원들이 주로 자신이 속한 학교에서의 승진·업적·재임용 평가나 이후 취업에서의 환산점수 획득을 위해 게재하려는 학술지의 코드화된 글(만)을 뜻하지 않는다. 학보에의 게재를 위해, 그리고 심사의 통과를 위해, 요구되는 엄격한 체계와 강요되다시피 한 관습적 구조를 당연하게 혹은 원치 않더라도 쫓아야 하는 정형화된 글쓰기를 가리키지 않는다.

게재의 목적만을 위해 작성된 기능성의 논문, 실적을 이유로 생산된 도구적인 논문이 아니다. ‘이론적 배경’, ‘실증적 연구방법론’, ‘분석결과’, ‘결론’ 등의 요소로 환원되지 않는 말 그대로의 논문(論文)이다. 즉 타자와의 지적인 교전을 위해 자신의 고유한 사유를 독창적인 스타일로 구축하고 효과성 있게 구현시킨, 일정한 형식성과 절절한 완성도를 갖춘 텍스트를 가리킨다. 자신이 치열하게 집중한 문제의식이나 새롭게 발견된 연구주제,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논의의 계기이자 지속적 발전의 기회로서 완결·표출·개방한 대화적 발문을 뜻한다. 기존체계의 변화와 갱신, 해체와 극복, 시비와 보강 효과를 다양하게 자아내는 지성적 텍스트 구성과 담론 실천의 활동이자 그 내용물이다. 이를 접하는 토론자나 독자들에게 공감이나 의문의 기회, 반성과 전유의 계기를 갖

6) 실제로 본인은 이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주변의 평범한 지인에게 ‘학회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그의 대답은, 그 어떤 주제함도 없이 간결해고 분명했다. ‘논문 발표를 하는 모임’. 물론 그것으로서 학회의 의미가 완성된다고는 생각지 않았지만, 논문 발표의 장으로서 학회를 우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쉽게 확인된다. 좋은 논문의 지속적 발표는 학회를 구성하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핵심적인 조건이 된다.

게끔 하는 자타 간 테스트의 텍스트를 의미한다.

요컨대 학회는 논문 발표와 이를 중심으로 한 이론의 축적, 그리고 그에 기초한 학문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그 존재의 의의를 인정받는다. 그리고 바로 이런 지속적이고 주기적이며 공개적인 논문 발표와 그에 대한 진지하고 책임감 있는 토론의 응답, 대화적 토론과 인정적 평가의 시너지(synergy) 관계를 통해 논문 작성자는 물론이고 응대하는 회원들과 그 계기를 제공한 학회, 이론 및 전공지식 자체의 동반자적 성장 발전이 가능해진다. 이런 학회를 건전하고 건강하며 바람직한, 즉 개념의 규정과 규범의 기대에 적합한 학회라 할 수 있다. 반대로 과도한 형식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표준화된 논문들이 산출되는 학보, 학회는 그 생산성을 의심받고, 건전성을 비판받는다. 나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사회 인문적 핵심 주제를 공부하는 학회일수록 이러한 요구를 더 강하게 받는다고 생각한다.

이에 비춰보자면, 현재의 학회는 명백한 위기상태이며, 그 위기는 무엇보다 발표 의욕과 노력, 실천의 부족으로서 드러난다. 한 마디로, 진지한 논문 발표의 문화가 크게 위축되어 있다. 정기학술대회 논문 모집을 위해 역대 집행부나 조직위가 늘 고생해 온 사실, 막상 학회장에서 마주치는 논문들의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거나 상당수는 완성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 그리고 회원들의 발표독려를 위해 여러 개인적인 혹은 분과 차원의 인센티브가 제시되고 있는 측면 등이 이 활력부진, 즉 빈사상태를 사실적으로 입증한다. 특정 학회의 사정이 아닌, 유관 학회 공동의 정황이자 보편의 지경이다. 분과별로 이루어지던 자체 발표의 활동들도 불황의 상태에 처했으며, 신진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작은 발표회 같은 기획도 결국은 일회적인 것으로 끝나버렸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목할 수 없는, 학계의 체질화된 문화다. 요컨대 삶의 양식·정서 구조·의미화 실천으로서의 문화는 ‘우리’ 학회에서 발표 및 토론의 부진으로 발현된다. 발표시간의 구조적 폐쇄 현상으로 집약된다, 지적 담론의 지속적 불황이다. 이에 대해 반문을 제기할 수 있

는 회원이나 분과, 학과가 있는지 궁금하다. 물론 국내외 각종 학회지를 통해 열심히 논문을 발표하고, 그래서 실적을 올리며 업적을 쌓아가는 연구자와 교수들이 있을 것이다. 이 학술지 글쓰기의 주제는 별도로 논의해야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많은 노력을 투입한 논문 게재(掲載)의 성과가 과연 공간(公刊), 즉 개인적 자유와 이론 구상·연구 결과의 공공적 제출 및 공통적 활용의 효과로 얼마나 제대로 이어졌는지는 의문이다. 학회의 토론풍화를 생성하는 에너지원으로 역류하고 있는지 회의적이다.

학회지에 게재해 성과로 가져가는 데 치중하면서, 과정 및 내용에 관한 토론을 위해 학회에 가져오는 데는 소홀하다. 굳이 후자의 불편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는 실용적이고 이기적인 정서 구조가 학회의 현실문화를 지배적으로 주조한다. 결국, 본인과 심사위원 몇몇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읽지 않는다는 소외된 저널논문, 책자의 부피가 부담되어 쓰레기통으로 먼저 간다는 비극적 학회지논문, 코드화된 작성법에 충실한 전공 분야 연구자·대학원생들이 참고문헌으로 인용하는 희극적 학보논문들이 쏟아진다. 그 많은 우수 논문들, 그 공증된 논문의 작성자·저자들은 막상 발표와 검증, 토론의 시공간인 학회에 출현하지 않는다. 정기학술대회에서의 치열한 교전 시간을 통과하려 하지 않는다. 참석했을 때조차, 학회에서 만나게 되는 것은 형식화된 발표의 의례이자 제스처들뿐이다.

대신 학술대회를 구성하는 텍스트들은, 부끄럽게도 몇 장뿐인 요약문이거나 미완성 상태의 노트들이다. 현장에서 배포되는 불성실한 복사지들이다. 결국 남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매우 두터우나 질적으로는 아주 불만족스러운 발제집이며, 그 간극 사이에 자리 잡는 것은 참여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회의이자 참석한 구성원 타자에 대한 불신이다. 함께 하는 학술의 시간·학회의 공간에 대한 냉소다. 공허한 발제집의 무게감은 이를 보충하기 위해 나눠주는 몇 가지 잡다한 선물들과 뒤섞여, 빈곤의 정서를 더욱 짙게 만든다. 학회를 마치고 나면 남는 씁쓸한 우

울의 심리는 구조화된 발표의 불황에 대한 정서적 반영이다. 이 우울의 풍토병은 개인적 차원의 논문 창작이나 집단적 수준의 지성 발휘를 방해한다. 활력 부진의 증상을 만연시킨다.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학회의 내재적인 풍경이며, 실제로 우리가 체험하고 확인하고 있는 학회의 구조화된 풍습이다. 의미 있게 작성된 논문·텍스트의 부족은 참여한 회원들의 의욕을 삭감시키고 불만을 증폭시키며, 그 심리적 거리감은 학술대회의 구조적 불황을 강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적극적 발표와 능동적 대담의 책임 의식, 윤리의 부재에서 비롯된 ‘공통세계의 종말’(The end of the common world)⁷⁾이, 다른 무엇보다도 지금 내가 속한 학회에서 핵심적 진상이자 결정적 증상으로 발현된다(Arendt, 1958). 학회로서의 일차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는 공론, 즉 학문토론·지적담론 수행성에 실패한 공동체의 부실한 초상이다. 자율적이며 공개적인 ‘대화가능성’(communicability)이 위축되고 지적 생성능력이 퇴화한 학회의 숨길 수 없는 진면목이다.

발표의 장소를 투표의 공간이 점령한다. 발표의 정치를 정치의 제도가 대신한다. 자연·학연을 중심으로 준비, 작성된 학회장 선거활동이 정기적인 학술대회를 빌미로 매년 진행된다. 눈에 띠는 것은 학회장 입구에 도열한 요원들이며, 그보다 많은 인구가 결과에 관심을 갖고 이리 저리 몰려다닌다.⁸⁾ 실제 논문 발표의 공간은 상대적으로 크게 한산하다. 그래서 매년 조직되는 것은 지적인 발표의 공론장이 아닌 형식화된

7) Arendt, H. (1958). *The Human Condition*. Chicago &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 58.

8) 그리하여 출마한 회장들은 모두가 학회의 개신을 약속한다. 그렇지만 실제로 학회는 공약(空約)에 그치고 마는 선거공약들이 반복되는 회장선출의 제도적 장으로 전락하고 만다. 학연과 지연에 기초한 투표장은 철저하게 기성의 권력화한 제도정치를 빼닮는다. 회장을 욕망하는 후보자들이 여전히 길게 대기 중이며, 회장직을 끝내고 방송사 이사 등 유력 선출직으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러한 점에서 최소한 회장이 되고자 욕망하는 자에게는 학회가 매우 중요하고 유리한 커리어 확립의 조건이 된다. 학회 타락의 전향적인 풍속도이다.

학술(學術) 대회이자 기득권적 학회장 선거의 연례행사일 뿐이다. 물론 그럴듯한 슬로건들이 현장에 걸린다.⁹⁾ 그러나 그런 표어와 실제 사이에 숨길 수 없는 괴리가 존재하며, 그 공백은 허실한 현실의 학회, 부정한 학회의 현실을 반증한다. 학회를 치장하고 있는 거창한 구호, 현란한 플래카드들은 사실 빈곤이라는 진상을 위장·은폐하는 허구적 수사, 기만적 장식일 뿐이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침체상태를 시비하거나 개신·극복하고자 하지 않는 ‘우리’의 집단적 둔감함이다. 현실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무감각한 태도에서 관습에 순응해버리는 안이한 자세다. 바람직한 습속으로 간파했을 때조차 이를 시정하려는 집단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사실 우리는 학회의 부진한 문화에 대해 공통의 책임을 갖는다. 학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잘못된 것에 대한 (무책임의)

9) 예를 들어 한국방송학회의 경우, ‘방송학, 성찰 속에서 미래를 본다’(2013년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흔돈의 시대, 방송학의 사명을 찾다’(2012년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흔돈의 시대, 방송학의 길을 묻다’(2012년 봄철 정기학술대회)와 같은 슬로건을 최근에 내세웠다. ‘스마트 시대는 진정 스마트한가? 스마트 시대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상상’(2011년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큐비디스 브로드캐스트’(2013년 봄철 정기학술대회)처럼 미디어 기술 등의 구체적인 테마를 내세운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언론학회나 언론정보학회 등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학계의 ‘반성’과 ‘성찰’의 철학이 강조된다. 새로운 이론·방법론의 ‘모색’과 ‘전망’의 기획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러나 실제로 발표되는 논문들의 내용은 이와 크게 부합되지 않으며, 과장된 구호에 그친다. 물론 모든 분과세션 및 자유세션의 논문들이 그렇게 맞추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획된 세션조차 구호에 비춰 실제 내용은 부진한 경우가 많다는 게 문제다.

한편 개별적인 글쓰기나 분과 및 학술지의 실천을 통해, 소수자적 성찰의 흐름과 반성적 실천들이 학계 내에서 내밀하게 운동 중이다. 이런 소수자적 특이성들의 개별적이고 위반적인 실행들은 존재 그 자체로서 매우 의미가 있다. 실천적으로도 중요하다. 다만 이러한 논의들이 집단적으로 제대로 공론화되지 않고 이를 위한 반성적 공론의 장이 구성되어 있지 못하며 그럼으로써 학회에 대해 성찰과 재구성의 효과성을 크게 반사하지 못하는 점은 여전히 한계로 지적될 수밖에 없다. 제도화되지 못하는 개별적 발설은 체제에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면서 텍스트 속에 갇히고 사적인 불만으로 묻히고 만다.

집단책임이다. 타인이 저지르지 않은, 그렇다고 내가 초래하지 않은, 그렇지만 사실상 ‘우리’ 모두가 유발시킨 공통세계의 반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통으로 짊어져야 할 책임이 된다. 바로 그 공통책임을 우리는 쉽게 회피한다. 아렌트(2003)의 말처럼 집단책임을 짊어지는 게 정치적이라고 할 때, 학회문제에 관해 우리는 너무나 비·반정치적이다. 무책임할 정도로 탈·정치적이다.

이렇듯 내가 속한 학회들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논문 발표·발표 논문의 공통된 현상이다. 말했듯이, 학회는 무엇보다 논문 발표라는 집합적 실천으로써 축조되는 장이며, 그 구성체의 활력은 발표 논문의 질적인 확보를 통해 표현된다. 논문 발표의 활동 부진이 학회라는 장 자체의 구조화된 위축으로 귀결되는 것은 이러한 점에서 너무나 당연하다. 학회를 치장하고 있는 과장된 슬로건들과 요란한 플래카드들은 부실의 현장을 오히려 징후적·증상적으로 ‘표출’(expression)하는 환상적 표면에 불과하다. 물론 능력을 갖춘 많은 연구자들이 학보의 논문제재로 분주하다. 해외 저널에도 논문을 싣는다. 그러면서 학회라는 장 내의 대화적 과정·집단적 교통의 활동에 관해서는 공통적으로 냉담하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해명할 수 없는 이중적인 면모인 탓에, 위기의 근원은 더욱 깊고 보다 위험하다.

3. 자본·권력의 발주와 토론회 공모의 이상체질

사실 학회의 침체는 경쟁의 논리가 강화되고 생존의 정서가 본격화된 신자유주의시대 대학사회, 학문사회의 취약성을 그대로 노출시킨다. 1990년대 초부터 이 땅에서도 빠르게 구축된 신자유주의는 대학을 더 이상 독립된 학문의 장으로 내버려두지 않는다. 학계라는 경계를 해체시키며, 상대적으로 자율적이던 학문 제도·영역의 실용적 재·프로그램화를 추진한다. 대학이라는 장의 운용방식을 시장의 논리에 맞춰 재

편하고, 학회의 문화를 시장의 질서에 종속시키려 든다. 학회·학계라는 장의 특성은 외부 신자유주의 지배적 코드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변동한다. 신자유주의 정치경제는 협직 교수나 임용 가능 연구자들에 대해서도 수치화·정량화될 수 있는 논문개체의 실적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러한 물리적 조건의 변화는 대학 및 학계 구성원들의 정서와 심리의 변화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¹⁰⁾

구체적으로, 현저하게 축소된 학문적 공간과 (재)임용의 입박구조에서, 생존을 강요받는 학계의 대다수 성원들은 실적에 들지 않는 학회 발표보다는 실적으로 계상되는 저널 발표에 집중하게 된다. 학회에 짚고 유능한 연구자들이 출현하지 않는 이유다. 설혹 등장하더라도, 학회는 더 이상 그들에게 발표와 토론, 겸증과 평가를 통한 학자적 정체성 확인의 장이 아니다. 자신이 이미 축적한 능력을 드러내고 확인받는 기능성 플랫폼에 불과하다. 그 자체만으로 생산적이거나 만족을 주는 활동이 될 수 없으며, 긴장감이 떨어지는 학회는 그들에게 별다른 매력을 주지 못한다. 결국 활동부진의 문화가 재생산된다. 능력이 이미 입증되고 속성이 오래전에 간파된 회원들의 관성적인 글쓰기가 계속되는 이유다. 학회는 그 활력을 계속 잃어간다.¹¹⁾

-
- 10) 이에 덧붙여 신자유주의 시대 국가연구재단의 과도한 훈육과 보수신문의 정당성이 결여된 대학평가, 그리고 이에 영합한 대학들의 관료주의적 지배의 문제도 반드시 언급될 필요가 있다. 학술진흥재단이 연구비 배정과 관리를 통해 연구를 '중독'시키고 인문학과 국가의 거리를 단축하며 결과적으로 인문학의 노예화를 초래한 현상에 대한 강명관의 성찰은 언론·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그 유관 학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 국가와 자본, 대학은 개별 학자의 위상을 물론이고 학계라는장을 포섭·포획한다. 지배와 훈육의 삼각동맹적 구조를 떤다. 이런 거시적 지배 권력의 문제, 학원화한 대학의 위기 문제에 관해서는, 개별 학문 분야의 차원을 넘어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필요가 있다.
 - 11) 이러한 현상은 내가 학계에 가입하던 1990년대 초중반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내가 학회에 데뷔한 것은 1993년 봄 '인론과 사회'라는 분과를 통해서였다.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한 것이었는데, 2시간에 걸쳐 본인의 논문을 두고 주저 없이 정확하고 비판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던 인상은 너무나 강렬했다. 다소 엘리트적이고 권위

어떤 학회의 경우, 새로운 회원은 거의 없이 매년 똑같은 사람들끼리의 잔치가 되어버렸다는 푸념이 공공연히 회자된다. 반대로 다른 학회들에서는 전혀 얼굴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소외감을 느끼고 갈 재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사실 두 이야기는 동일한 현실, 공통된 현장의 앞뒷면에 불과하다. 학회에서는 더 이상 제대로 된 논문의 발표와 토론, 학문적 논의의 창조적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치열한 지적 교전을 바탕으로 한 대화적 교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통상적인 발표와 의례화된 토론을 넘어선 지적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다만 기능적이고 형식화된 마주침만이 학회장 안팎에서 진행한다. 그런 기능적 조우에서 의미 있는 자기존재감 혹은 정체성의 확인이 이루어질 리 만무하기 때문에, 충족되지 않은 욕구는 권태로 귀결되고 만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자발적인 논문 발표를 기본으로 한 건

주의적이며 폐쇄적인 분위기였지만, 오직 논문 발표와 토론으로서 지적인 시공간을 구성해 낸 측면에서 당시의 ‘언론과 사회’는 자타가 인정하는 학계의 모범이자 학회의 중추였다.

이런 분과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언론학회 등 유관 학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학회 내 문화연구 분과 구성에도 적극 나섰는데, 이런 체험은 학자적인 본문이나 학문을 바라보는 태도, 그리고 사회참여적인 실천 역량을 정리하고 확립하는 데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최소한 내가 속한 문화연구 분과를 통해서는 동료들과 치열한 학문 토론의 기회를 이어갈 수 있었고, 새로운 학회논문 발표의 주체로 나서게 된 대학원생들의 훌륭하고 맹렬한 발표에도 참여할 수 있었다. ‘문화연구캠프’라는 대안적 형태의 학술포럼을 학회의 경계에서 조직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도 빠트릴 수 없다.

유감스럽게도 이런 문화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상당 부분 망설되었다는 게 본인의 판단이다. 치열한 논의의 문화는 대학원 세션이나 문화연구 분과 혹은 학회 일반 그 어디에서도 사실상 형식적으로 해체되었다는 게 본인의 냉정한 생각이다. 한때 가장 활력이 높은 문화연구 분과라는 평가가 많았다는 점에서, 그다지 무리한 판단은 아닐 것이다. 사실 비판커뮤니케이션, 정치경제학, 저널리즘 등을 공부하는 인근 동료들의 학문적 토론회도 이와 비슷하게 약화된 감이 있다. 만약 이러한 일반화에 오류가 있다면, 진단과 다르게 활력을 유지하거나 증진시켜 결과적으로 학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분과가 있다면, 그 구체적이고 예외적인 사례는 다른 기회에 매우 유의미하게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강한 학회 문화의 공백 상황을 각종 외부후원금과 이를 기본으로 한 프로젝트 보고서의 발표가 대신한다. 자발적으로 조직된 학술논문 발표 세미나의 활력을 외부로부터 재정 후원을 받은 리포트 발제 심포지엄의 타성이 대체한다. 학회 내부의 재정적 필요와 외부 후원자의 경제적 이익이 합작해 빚어낸 것이기 때문에, ‘세미나’와 ‘심포지엄’을 내세운 학회의 수시 행사들은 대부분 일회적인 이벤트에 그친다. 물론 형식적으로 기획 단계나 공모 절차를 거치지만,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용에 있어서도 학술행사로서는 미달인 경우가 태반일 수밖에 없다. 결국 졸속인 이벤트들을 학회가 외부 후원을 받아 회원들을 위해 혹은 그들과 함께, 학술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

후원자와 학회, 회원 모두에게 유리한 게임이다. 우선 후원 기업·단체의 입장에서는, 유력 학회·행사 후원자격을 통해 직접적인 실리를 챙기거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다. 정책에 깊숙이 관여한 학자와 우호적 근친관계를 맺을 수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기꺼이 부담할 비용이다. 능동적으로 지출할 투자처다. 한편 집행부는 큰 학회 규모를 뒷받침할 재정을 조달하면서 프로젝트를 회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나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사실상 외부 지원금은 대형화한 학회 운영의 엔진이다. 마지막으로, 외부 세미나 발제에 참여하면서 학자들은 학교와 학회, 업계 내 권위·영향력 확보의 기회를 갖는다. 이들 세미나의 대부분이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및 주요 현안과 관계되거나 특정 업계의 특수한 이해와 연루되어 있는 탓에, 발제 참여는 자연스레 현실 게임 참가의 루트가 된다.

이처럼 3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유리하며 필요한 일종의 보편적 복지 프로그램이자 편리한 정치경제적 유착의 매듭이다. 때문에 외부 후원 세미나는 쉽게 끊어지지 않고 학회의 공통된 관행으로 고착되어 있다. 이 순간에도 지속되는 자동운행메커니즘이다.¹²⁾ 요컨대 각종 세미

12) 오직 하나의 일례로서, 이 글을 쓰는 시점에 눈에 띤 행사를 밀해보자. 2014년

나와 심포지엄들이 학회의 일상성을 외현한다. 정치·이념적 차원에서 상당한 일관성과 편향성을 지닐 수밖에 없는 토론회다. 일정 금액을 조달할 수 있는 미디어 업계·산업·협회가 사실상 지정한 것이거나 이들과 긴밀히 협의한 의제·주제를 중심으로 행사가 꾸려지는 탓이다. 짧은 기간에 외부 후원자의 의도·목적에 맞춰 기획된 행사는 커뮤니케이션 이론이나 미디어 철학과 무관한 시장·산업·정책·기술 중심적 사안들을 학계의 지배적 담론, 주도적 의제로 배치하는 효과성으로 귀결되고 만다.

유감스럽게도, 토대에 의한 상부구조의 결정 혹은 조건화라는 고전

3월 18일 한국방송학회는 ‘유료방송시장의 재원 배분 구조와 홈쇼핑 채널’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본인을 포함한 회원 전체에게 공지를 한다. 3월 28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행사다. ‘유료방송생태계와 홈쇼핑 채널의 역할’, ‘스마트 미디어와 홈쇼핑의 미래’라는 2개의 발제가 학회 회원인 교수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정부와 시민·시청자단체 인사들로 토론 패널이 구성된다. 그런데 일정을 보면, 세미나 발제 공모가 2월 28일에 이루어졌다. 3월 7일까지의 열흘 동안을 공모 기간으로 한 내용이었다.

결국 길게 잡아서 20여 일, 짧게는 불과 10일 만에 학회 주최의 세미나 또 하나가 기획·구성되는 셈이다. 이를 위한 발제가 준비되는 것이다. 실제 발표 내용문의 수준과 무관하게, 이러한 과정을 졸속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무리가 없어 보인다. 예외적인 사례가 아닌, 유관 학회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공통된 행동패턴이다. 즉, 문화다. 한편 학회는 이 세미나가 ‘한국 TV홈쇼핑협회 후원’임을 밝혔는데, 학회 홈페이지에 기획 의도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케이블,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들 간의 경쟁이 강화되면서 방송시장은 시청자라는 제한된 자원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이들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수신료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홈쇼핑채널 송출수수료도 매출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간 홈쇼핑채널 송출수수료는 유료방송시장에서 재원 조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지만 그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낮은 수신료와 홈쇼핑채널 송출수수료에 의존하는 유료방송시장의 기형적인 수익 모델은 유료방송사업자들의 플랫폼 경쟁력 강화보다는 경쟁적 채널배정을 통한 송출수수료의 지속적 인상, 상품판매채널의 증가로 인한 유료방송의 과도한 상업채널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유료방송시장의 재원배분구조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바람직한 유료방송생태계의 발전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적인 정치경제학 기본 테제는, 신자유주의 시대 학계의 운영패턴을 설명하는 데 매우 유효하다. 통신·미디어·정보 거대산업이 자본주의 경제의 중추가 된 오늘날, 이 자본권력은 그 위상을 반영·표현하듯이 커뮤니케이션·미디어·언론·정보·방송학회를 경제적으로 지배한다. 정치적으로 통제하고, 이념적으로 장악하며, 문화적으로 지도하는 체제를 만들어낸다. 지배와 종속의 수직적 구조다. 지원하는 외부와 중매하는 학회, 실행하는 회원 사이에 말 그대로의 산학 협력의 관계가 조성된다. 직·간접적 유대의 관계, 실용적이고 실무적인 협업의 체계는 담합의 구조다. 시장질서가 학회라는 공간조차 예외 없이 관통하고 있는 현실의 실상이 세미나의 번성, 심포지엄의 활력, 프로젝트의 범람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이러한 학회 지배구조의 고착과 경제적 담합구조의 강화는 학회 자율성 윤리의 명백한 훼손, 학회 독립성 책무의 심대한 위반 효과를 유발한다. 사실 외부세계와 보다 책임성 있게 관계 맺기 위해, 학회는 윤리적이고 정치적이며 실천적인 차원에서 몇 가지 조건을 요구받는다. 우선 첫째로, 일차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학회는 부정과 부패를 멀리하고 투명한 운영과 건전한 회계를 유지하며, 논문작성 등과 관련해 회원들이 엄중히 윤리를 준수할 것을 요구받는다. 상식적이고 당연한 요구사항이다. 물론 학회에 따라 재정의 규모, 투명성의 수준, 윤리규범의 강도는 차이날 수 있다. 일정한 표준이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학회와 회원 스스로가 적정 수준의 규모와 회계·재정의 상태, 윤리규범에 관해 주기적으로 돌아보고 반성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 된다.

둘째, 정치적인 측면에서 학회는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고수해야 한다. 먼저 학회는 내부적으로, 회원들의 다양한 입장과 차이나는 이념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회원들의 학문적 자유와 학회의 학술적 자율성이 외부의 그 어떤 권력에 의해 방해되거나 억압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하기 위해, 외부적으로, 학문 공동체로서의 학회의 독립성과

학회의 기본이 되는 논문 발표의 객관성을 해칠 국가와 기업 혹은 유력한 이익단체들과는 최대한 거리를 두어야 할 것이다. 권력으로부터의 엄격한 분리, 자발적 소외다. 한국 사회 내 대학의 타락, 지식인 사회의 무력화, 그리고 학회라는 또 다른 사회의 ‘비리’(非理, 타당하지 않음) 및 ‘부정’(不正, 옳지 않음)이 모두 외부 권력과 사적 이해관계들과의 유착·공모·결탁에서 빚어진 점을 유념해 볼 때, 정치적 태도는 곧 윤리적 입장과도 직결된다.

합리성을 추구하고 사회정의를 지향하는 인문사회과학 학회일수록 이 두 번째 요구조건의 구속력은 더욱 커진다. 사실 학회의 규모가 커지고 영향력이 증대함에 따라, 시장 중심적 제도·정책·산업 연구자들이 양산되면서, 학회의 외부 효용성 및 활용 가능성도 높아졌다. 국가가 원하는 제도의 방향과 정책의 내용, 자본이 기대하는 담론의 질서와

이념의 행방을 학회라는 채널을 통해 생성·유발·설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문성으로 가장하고 중립성으로 포장된 학회를 매개로, 사적인 이익을 유포하고 특수한 이해관계를 관철시킬 수 있다. 그런 용도 때문에, 외부 자본·권력은 끊임없이 자기 논리를 학회 내부로 유입시키고자 노력한다. 학자들을 네트워크로 엮어내고, 이들을 통해 자신들의 의제를 세팅하고자 한다. 자신의 정치·경제적인 관심사를 학계의 학술·이론적 문제의식으로 설정하려 든다.

말했듯이, 다양한 권력과 이해관계들이 학회를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이유다. 학회를 후원하고 회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불하는 이유다. 학회는 지금 토론회로 넘친다.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같은 정부기관이 세미나를 공동주최하고, 공영방송 KBS나 통신회사 KT 등이 심포지엄을 후원한다. 특정 계별이나 신문의 문화재단이 연구논문을 지원한다. 지정한 주제와 원하는 결론을 대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노골적인 담합의 경우도 있지만, 협력·유대 관계 증진을 위해 혹은 의제 선점과 담론 설정을 위해 후원금을 전달하는 경우 등 케이스는 실로 다양할 것이다. 그 어떤 경우이든, 외부 권력과의 재

무적 결합은 결국 학회와 물주 사이의 정치적 결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학회의 학문적인 퇴행과 정치적인 종속, 윤리적인 타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4. 호텔로 외출하는 학회의 종속적 정치경제학

결정적으로, 학문공동체로서의 정당성을 의심받게 된다. 학회 정당성의 위기가 초래된다.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요구조건을 심대하게 위반한 게 그 이유다. 이런 점에서 새겨볼 사건이 있었다. 1990년대 초 당시 한국정치학회는 이미 회원 수가 1,200명을 넘어서고 있었다. 1953년에 탄생한 학회로서 위상 강화를 이룬 셈이다. 대형 학회로의 외형적인 성장이었다. 문제는 덩치를 키우고 영향력 있는 제도로서 발전함에 따라 여타 제도권과 맷은 결탁의 관계였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학회를 활용하고자 하는 외부의 권세들과 협작하는, 일종의 공모 관계가 맺어진 셈이다. 학회는 1992년 경주의 조선호텔에서 ‘선거와 한국정치’라는 이름의 세미나를 개최한다. ‘하계학술대회’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붙인다. 여야 대통령 후보들을 부른다. 그리고 그들에게 수천만 원의 행사 비용을 물리고 찬조금을 받는다.

지난 1953년에 발족해 4년의 연륜을 쌓은 정치학회의 회원은 1,2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해마다 100여 명이 새로 기입하는 등 회원 수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1년 동안 쓰는 경비만도 1억여 원에 이른다. 한해에 두 번 나오는 『한국정치학회보』와 『한국정치학회 소식』 등의 발간비, 운영위원 연구비, 국내외 각종 회의 세미나 행사비 등이 이에 드는 비용이다. 그러나 회원들이 2만~3만 원씩 내는 회비로는 감당할 수 없어 교육부, 외무부 등 정부부처, 산학협동재단, 포철 등 기업으로부터 찬조금을 거두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회장단의 능력에 따라 예산운용

에서 진폭의 묘가 있기 마련인데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찬조금 물의도 회장단의 예산과목에서 빚어진 게 아니냐는 것이 관계자들의 추측이다.¹³⁾

집행부의 과욕이 빚은 일회적 해프닝이 아닌, 대형화와 권력화에 따른 학회의 구조적인 비리가 발생한 것이었다. 이 일로 한국정치학회는 홍역을 치렀다. 소장학자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외부여론도 크게 악화되었다. 결국 임원진은 사퇴하고 쇄신을 약속했다. 나는 이후 한국정치학회가 어떻게 윤리성을 회복했는지, 과연 정치적인 독립성을 되찾았는지 알지 못한다. 여타 학회와는 무관한, 정치학회의 예외적 일례로 여길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자신할 수 없다. 오히려 다른 대형 학회들의 경우에도 유사한 혹은 공통된 일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하게 의심한다. 최소한 내가 속해있고 이 글의 핵심대상이 되는 ‘언론’과 ‘방송’, ‘커뮤니케이션’, ‘정보’, ‘통신’, ‘광고’, ‘홍보’, ‘소통’을 내세운 여러 학회들의 경우, 지속적인 현상이자 현재적인 문제라고 단언할 수가 있다.

중대한 논란거리로서 외부에 의해 지적·비판되지 않고, 심각한 문제로서 내부로부터 제기되지 않았을 때문이다. 한국언론학회를 비롯해 대형화한 유관 학회들은 더 이상 대학이라는 울타리 안에 머물지 않는다. 주최한 학교의 후원과 총장의 리셉션에 만족하지 않는다. 고급스럽고 안락한 호텔로 자리를 옮긴다. 리조트라는 별도의 장소를 찾는다. 미국의 학회와 같이 카펫 깔린 회의장에서 토론을 벌이며, 세계적인 학회처럼 화려하게 치장된 로비에서 참가자로서 만난다. 하루 정도의 일정이 끝나면 만찬이 기다리고 있을 테며, 다음날에도 회원들과 동반한 가족들을 위한 ‘투어’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학회는 제주도나 부산, 경주 등 휴양지로 출장을 나선다. 고급호텔을 출입하며, 회원들인 우리도 사실상 1박 2일의 관광성 학회

13) 『한겨례신문』 1992. 7. 22. ‘명예 권력 쫓는 일부 정치학자들’.

를 위해 외출한다.

회원들의 자발적인 부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거나 적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 유발되는 상당한 재정 부담을 학회는 감당하지 못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외부 후원을 통해, 한국정치학회가 아주 오래전에 그랬던 것처럼 후원금 모집을 통해서 경비문제를 해소할 수밖에 없다. 물론 ‘후원’과 ‘공동주최’라는 그럴듯한 형식성은 일정한 연구 성과물을 내용적으로 수반하며, 이 두 조건은 외부자금에 의한 학회운영이라는 현실과 학술대회 경비조달이라는 실상을 편리하게 은폐한다. 실제로 학술대회는 물주들이 의뢰했거나 이들과 협의해 결정된 주제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획 세션’들로 꾸며진다.¹⁴⁾ 급히 공

14) 2014년 4월, 한국방송학회의 봄철 정기학술대회가 제주도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열렸다. 조직위가 꾸려지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뉴스레터까지 마련되었다. 후원자의 모습은 이른바 ‘기획세션’의 특성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지상파 방송 외주제도 모포시스(morphosis) : 현황 및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2쪽지, ‘EBS 교육 콘텐츠의 가치 제고 및 바람직한 재원 구조 정립 방안’이라는 주제로 2쪽지, 그리고 ‘방송 ·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채널거래 시스템 개선 방안’을 주제로 2쪽지가 특별 기획 · 공모된다. 사실상 학회 운영 및 학술대회 진행을 위한 외부후원금, 지원금의 출처라고 할 수 있다.

‘이동통신 30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논하다’라는 제목의 별도 기획세션은 SKT의 후원으로 조직된다. “이동통신 30년을 맞아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새로운 양식을 제공한 과거, 사람과 사물 간 상호작용 양식을 보편화하고 있는 현재, 그리고 ‘곧 다가올 모든 것을 연결하는 시대’에 대해 학계와 산업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연구의 성과와 의견을 교환하는 장”으로 마련된다. 이렇게 구성된 토론장에서 이동통신자본의 문제가 좌파적, 마르크스주의적, 정치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심도 있게 개진될 수 있을지는 극히 회의적이다.

이밖에 후원자 주도의 기획이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합리적인 유료방송 채널 운용 정책’, ‘위성방송 서비스 관련 매체사적 · 정책사적 미래 진화 방향’ 등과 같은 기획들이 후원에 관한 별도의 설명 없이 준비 · 공모된다. 물론 이러한 폐단은 여타 학회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판행이다. 물론 방송학회는 발표 논문의 질적인 확보를 위해 몇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렇지만 이런 긍정적인 측면은 외부 후원에 기댄 외유성 학회행사라는 설계 구조의 근본적인 한계, 문제점, 시빗거리를 여전히 해소시키기에 역부족이다.

모가 이루어지고 연구자들은 짧은 일정 내 발표문을 마련하지만, 그다채로운 구색은 호텔로 나선 대회의 외관을 그럴듯하게 가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길 수 없는 것은, 당당히 학회·학술대회 후원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미디어·업계·자본의 얼굴이다. 2013년 부산 해운대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의 경우를 보자. MBC와 SBS문화재단, KBS, EBS, 부산 MBC, 지역민방 KNN이 총출동된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 CMB, CJ 헬로비전도 빠지지 않는다. 후원자 풀(pool)은 가히 광대역적이다. SK Telecom, T-broad와 같은 과점적 통신사들이 당연히 참여하고, 삼성과 GS SHOP도 이름을 올린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동서대학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도 후원자 명단에서 볼 수가 있다.¹⁵⁾ 이러한 패턴은 물론 한국방송학회만의 예외적인 현상인 아니다. 비판적 성향의 한국언론정보학회조차 2007년 네이버와 SKT, KTF와 같은 거대 통신자본으로부터 학술대회의 후원을 받고 있었다.¹⁶⁾

결코 최근에 벌어진 현상이 아니다. 학회가 미디어 기업과 통신 자본이, 그리고 재벌이 내놓은 자금을 갖고 호텔 등지를 돌며 학술대회를 개최한 것은 이미 오래된 문화다. 신자유주의가 팽배하고 미디어산업이 본격 성장하며 미디어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그 덩치를 키워갈 시점과 공교롭게도 일치하는 현상이다. 미디어자본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첨

15) 호텔로 나가지 않고 교정에 머문다고 해서 후원의 규모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광주대학교에서 열린 2012년 동일 학회의 봄철 학술대회의 경우, 여전히 SK telecom, YTN science, 삼성전자, 한국종합편성채널협의회의 이름을 후원자 명단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리랑TV, KT, CMB, GS SHOP, EBS, CU MEDIA, CJ E&M 등 다양한 자본과 다채로운 업계, 다기한 권력들이 후원에 나섰다.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종편’업자들로 구성된 한국종합편성채널협의회의 학회 후원이 특히 눈에 띈다.

16) 진보적인 성향의 언론정보학회에 대한 이러한 미디어·통신 자본의 재정 후원은 이명박 정권이 들면서 완전히 사라진다. 이 또한 학회에 대한 외부 업계의 후원이 지닌 정치·정략적인 성격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예한 시장 규제 및 진홍을 둘러싼 정부정책 논의, 지배구조 문제를 비롯한 각종 법제도 논쟁이 활발하게 이루지는 기간 동안에 나타난 현실이다. 요컨대 학회는 탈규제화 분위기 속에서 치열하게 경합하면서 수익·이익을 키워나가며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법·제도·정책을 만들거나 고쳐나가고자 하는 사장의 주요 이해 당사로부터 재정의 후원과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 외형적으로 급성장했다. 이들의 후원금으로 성대한 학술대회를 치러왔던 것이다.

문제는 외부 단체의 빌주를 받아 토론회를 기획·주최하거나, 미디어 기업의 후원을 받아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학회 자체가 총체적으로 재원을 제공하는 외부 권력에 종속된다. 학회가 사실상 외부 거대 미디어·자본·권력의 재정지원을 통해서 성장하고 이에 기반을 두고 운영되며 그로써 지속되는 기형적인 종속체질이 굳어버렸다. 합리적이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말 그대로의 비리 구조가 자리 잡은 것이다. 자본·권력의 경제 지원과 재정 후원에 기대어 그 덕치를 키운 학회다. 말을 바꿔, 최근 20년 사이에 뚜렷해진 유관 학회의 대형화는 사실상 자본의 후원, 권력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낸 부정한 성과일 뿐이다. 20년 전 한국정치학회와 마찬가지로, 윤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시비가 일 수 있는 지점이다.

문제적 현실은 학회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금방 확인된다. 한국언론학회의 경우, 10년 전에 이미 한해의 예산 규모가 10억 원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중 상당액을 외부 후원 재정으로 채운다.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2003년 10월 12일부터 2004년 10월 16일까지를 임기로 한 한국언론학회 제30대의 결산 보고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그해 학회의 총 수입은 정확하게 972, 869, 923원이었다. 전 기이월액과 학회 기타활동으로 인한 자금 수입을 제외한, 학회 '목적활동으로 인한 자금 수입액'이 총 904, 711, 102원에 이르렀다.¹⁷⁾ 그런데

17) 본인도 이사로 참여한 31대의 경우, 이 액수는 673, 783, 002원으로 3억 원 가량이

그중 회원들이 내는 회비수입은 불과 72,353,000원에 그쳤다. 채 10%가 되지 않은 것이다. 도서관 회원과 단체 회원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개인 연구자·학자에 해당하는 일반 회원이 낸 회비는 47,355,000원으로 줄어든다.

총 수입의 5% 정도에 불과한 액수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예산이 외부로부터 조달되고 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을 제외하고, 방송위원회와 한국언론재단이 합쳐 4억 원에 가까운 돈을 댔다.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정통부, KBS이 수천만 원씩을 내고 있으며, SK telecom과 『조선일보』 미디어연구소는 각각 1억 이상의 돈을 내놓는다. 회비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832,358,102원이 이른바 ‘외부지원 수입’에 해당한다. 그 돈이 학회를 구동시킨다. <표 2>에서 보는 것과 같은 다양한 토론회, 심포지엄, 세미나 비용으로 지출되며, ‘탄핵방송보도’ 등의 연구(팀) 경비로 들어간다. 보다 구체적으로, 8천2백만 원 정도가 두 차례 학술대회와 학보의 발간에 들어가며, 그보다 대략 10배 정도나 많은 7억 3천9백만 원이 이른바 각종 ‘학술활동 경비’로 지출되고 있다.¹⁸⁾

신자유주의 경제논리상에서는 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학회라는

줄어든다. 전해와 똑같이 1억 2천4백만 원을 후원한 SK telecom을 제외하고는 외부 단체나 기업들이 후원금을 대폭 줄인 탓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상수도 사업, 케이블협회, 무선 관리단, 미디어오늘, YTN, EBS, KT, 게임산업개발원, MBC, 한국방송광고공사, 방송문화진흥회, 방송위원회, 한국언론재단이 지속적으로 혹은 신규로 외부지원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18) 31대 한국언론학회의 연구 및 심포지엄을 위한 ‘학술활동 경비’에는 ‘동아시아국가 간 TV 프로그램 교류의 의미’(2천7백만 원), ‘신문위기 진단과 대안모색’(7천4백만 원), ‘새로운 미디어 소비유형 및 멀티플 미디어 유저’(7천8백만 원), ‘IPTV 도입 정책과 사회문화적 영향연구’(2천만원), ‘공영방송세미나’(2천9백만 원), ‘케이블 TV 1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3천5백만 원), ‘광고매체로서의 YTN 경쟁력 강화방안’(5천만 원), ‘언론보도현황 및 성향분석과 홍보전략수립’(1천2백만 원) 등이 포함된다. 봄철 정기학술대회를 위해 9천만 원 정도가 지출된 것도 주목할 만 하다. 이에 비해 분과연구회 발표 지원금은 약 5백만원에 그친다.

〈표 1〉 2003년도 한국언론학회의 외부지원 수입 내역

한국학술진흥재단	12,000,000
한국언론재단	164,599,475
방송위원회	226,729,217
정통부	61,039,410
한국방송광고공사	53,000,000
삼성	30,000,000
KBS	29,990,000
SK Telecom	125,000,000
『조선일보』 미디어연구소	100,000,000
『서울신문』	30,000,000

* 출처: 한국언론학회.

〈표 2〉 2003년도 한국언론학회의 학술활동경비 지출 내역

쟁점과 토론 세미나 4회	22,280,045
대학원생 컨퍼런스	4,000,000
한일 국제심포지엄	33,032,327
정치광고	32,994,710
미디어교육	32,677,600
전국 신문지국 실태조사	84,130,200
언론학 포럼 (언론인직업에 대한 비교사회학적 연구, 전환기의 한국언론, 전환기의 한국형 방송저널리즘 연구)	17,658,530, 22,308,550, 27,536,250
디지털 콘텐츠 인력양성평가연구	53,304,110
여성특위 1, 2차 세미나	43,282,320
KI 도입기반 구축연구 및 세미나	121,922,574
단핵 방송 보도	36,625,808
한국 언론에 관한 연구	80,000,000
『대한매일신문』 창간 100주년 기념 연구 및 세미나	22,441,990
모바일 콘텐츠 이론·제작 연구 및 세미나	95,006,545

* 출처: 한국언론학회.

학문공동체에 대한 윤리적 기대에 비춰본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면 모다. 정치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유관 학회 공통의 문제다. 1993년 내가 학회에 첫발을 디뎠을 때 나타나기 시작된 현상이며, 2014년 지금도 유관 학회 공통으로 목격되는 현실이다. 정기학술대회에 기업 후원자들이 계속해 돈을 댄다. 외부가 발주한 심포지엄 발표자 공모가 계속된다. 수입의 상당 부분을 자본·권력의 지원금에 의존하는 학회의 기형적인 구조가 이렇게 재생산된다. 학회 예산이 확보되고 학회의 규모는 유지되겠지만, 이와 같은 재정적 종속상태는 학회의 정치적 독립성과 학문적 윤리성을 치명적으로 훼손시킨다. 후원의 대가로 내놓는 프로젝트와 심포지엄, (연구) 보고서의 이념적 편향성이 종속적 정치경제학의 모순을 자연스럽게 표출한다.

5. 사회적 실천의 왜곡과 현실의 부정한 간섭

이처럼 외부 후원에 재원의 상당액을 의존하면서 학회는 미디어·자본과 자연스레 결부된다. 재정적 독립성을 상실한 채, 후자의 우월적 지위에 경제적으로 종속되고 만다. 다만 대학교수들과 연구자들이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구축한 자발적 지식공동체의 신화와 전문가적 학술 공동체라는 권위가 외부의 견제를 배제하면서 내부의 모순 현실을 은폐한다. 여기서 언론·방송·정보·통신 학회들을 후원하는 집단들이 다름 아닌 사회적 의제 설정의 기능, 감시의 역할, 저널리즘 수행의 책임을 떠맡은 바로 그 당사자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막대한 금액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미디어·자본·권력이 후원 학회를 비판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거꾸로도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재정적 협업관계는 상호 간 공통이익을 위한 정치적 담합구조로 귀결된다.

윤리적 성찰성과 정치적 독립성. 이 두 가지 요건은 현실의 언론·방송·정보·통신 유관 학회에서 극적으로 훼손된 상태다. 외부가 학회에

대해 침묵하고, 학회 또한 외부 문제에 관해 발언을 회피하는 소극적 관여의 공모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이런 학회의 윤리성 위반이나 독립성 훼손의 문제는 공공연한 논란으로 설정되지 않는다. 일반 학회 혹은 특정 학회에 대한 정당성 시비가 외부 여론이나 감독에 의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회원들의 끊임 없는 감시와 학회 차원의 지속적인 성찰이 중요하다. 윤리적인 타락과 부패를 막고 정치적인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미 윤리적인 감각을 크게 상실한 학회 내부에서 이러한 반성적 기운, 비판적 목소리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침묵의 정서가 훨씬 더 일반적이다.

반성적 움직임의 부재. 학회가 처한 윤리적·정치적 문제현실의 또 다른 일면이다. 최장집은 앞서 언급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한국 정치학회가 “우리 정치 현실과 관련된 근본 문제에 대한 접근과 보다 실천적 대안의 탐색을 위해 대규모 행사 중심의 학회 활동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¹⁹⁾ 이러한 성찰이 정확하게 현재의 커뮤니케이션 유관 학회에 대해서도 요구된다. 조직적 침묵과 집단적 방관의 정서가 팽배한 학회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유감을 표하고 푸념을 늘어놓는 회의주의, 냉소주의에 그친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후원 기업들에 대한 이데올로기 지지의 담론 서비스, 후원 산업에 우호적인 정책의 여론화 작업, 이들을 위한 법제도 제정의 연구노력이 계속된다. 학자·전문가라는 이름으로, 학회라는 울타리 안팎에서 은근히 혹은 공공연히 이루어진다.

‘대규모 행사 중심의 학회 활동’은 학자적 윤리의 타락을 초래하고 학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데 그 부정적 효과가 그치지 않는다. 미디어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나 실천적인 대안 모색을 포함한 현실 참여라는 학회의 또 다른 구성·운영 요건을 구조적으로 방해한다. 체계적으로 왜곡한다. 요컨대 외부 자본·권력에의 재정 의존과 이에 바탕

19) 『동아일보』 1991. 12. 19. ‘학계 거듭나기 자성 목소리’.

을 둔 학술 풍토는 학회의 건전한 사회참여를 봉쇄한다. 필요한 사회실천을 억압한다.²⁰⁾ 한국 사회가 처한 주요 현실에 관해, 특히 언론·방송·정보·소통과 관련된 중요한 현안들에 대한 학회의 관심을 가로막는다. 권위 있는 지성적 공동체, 비판적인 학문적 공동체로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만든다. 사회 전체가 표현의 자유, 커뮤니케이션의 권리, 민주정치의 원리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고난에 처해 있을 때조차 학회는 외부 후원 세미나, 업계 협찬 심포지엄으로 바쁘다.

프로젝트 공모와 학술대회 기획세션 구성작업으로 분주하다. 이명박 정권 때 심화되어 현 정권에서도 지속되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의 현실, 위원회의 편파적인 심의와 사이버공간 통제의 문제, 정보기관에 의한 여론조작 및 선거개입의 사태에 대해 귀 기울일 여력이 없다. 공영방송

20) 한국언론학회 홈페이지에는 그 설립의 목적과 관련해 이렇게 적고 있다. “한국의 언론 및 커뮤니케이션의 연구, 교육, 조사 분석을 행하여 국내외 관련학계와의 학술교류에 힘쓴다. 또한 언론현업과 학계와의 친목과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한국 언론의 올바른 위상을 정립하고 언론인의 자질과 전문성을 함양하고 산학 협동의 바람직한 결실을 통해 올바른 언론문화 창달과 언론의 공익적 책임을 완수하는 데 공헌한다.” 한참은 낡은 목적성이다. 몇십 차례의 개정을 통해 이제 학회 정관의 제3조 ‘목적’에서는, “이 학회는 저널리즘 및 커뮤니케이션의 연구, 조사 및 회원 상호 간의 협조와 친목을 도모하고 관련학계와 상호 교류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언론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덧붙이고 있다.

이 글을 준비하면서, 한국언론학회의 탄생 과정에 대해 보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한국언론학회의 보수주의라는 것이 결코 최근의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보수적 환경에서 사실상 보수적 의도를 갖고 만들어진 학회였으며, 이는 이른바 학회 1세대로서 그 구성의 작업에 참여한 원로학자들의 면모나 이데올로기, 활동 방식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특히 5·16 군사 쿠데타를 거치면서 한국신문학회(한국언론학회의 전신)이 어떻게 국가권력과 이념적으로 조응하면서 미디어 관련 이론, 담론을 제도적으로 구축해 왔는지에 관해서는, 별도의 작업을 통해 비판적으로 반드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올바른 언론문화 창달과 언론의 공익적 책임’이라는 지향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역사적 맥락에 비춰 평가해야 하는 것이다. 현행의 학회에 초점을 맞추면서 안타깝게도 본인은 바로 이 흥미롭고 중요한 지점들을 글에서 제외시킬 수밖에 없었다.

의 붕괴와 공적영역 폐쇄의 위기, 저널리즘의 죽음과 민주주의 해체의 위험 등에 관해서도 전혀 발언하지 않는다. 공영방송의 뉴스가 국가홍보 채널화되어도, 이를 진지하게 검토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는다. 공영방송의 앵커가 다음날 청와대 대변인으로 변신해도, 저널리스트의 윤리나 방송의 독립성과 관련해 논의할 진지한 세미나를 갖지 않는다. 외부의 이해관계와 복잡하게 얹여있는 사정, 대형화하면서 내부 회원들의 구성 또한 정치적으로 복잡하게 얹힌 형편이 그 이유인가?

사실 학회는 사회·정치적 현실에 관해 소극적인 태도로만 일관한 것은 아니다. 현실의 정치, 정치의 현실에 깊이 관여했다. 다만 편파적으로 그러하다. 2004년 6월 한국언론학회가 당시 방송위원회로부터 의뢰 받아 수행한 ‘탄핵방송보고서’²¹⁾가 그 대표적인 일례이다. “아무리 느슨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도 공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바로 그 보고서다. 여론이 엇갈린 과제를 학회가 외부의뢰를 받아 수행하는 것의 적절성, 연구반 구성에 있어서의 대표성, 보도 ‘공정성’ 분석방법의 타당성과 연구결과의 신뢰성 등을 둘러싸고 학회 안팎에서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언론학회는 다음과 같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방송 저널리즘 내용분석 연구의 기념비적 성과이고 타당한 연구방법,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기초하고 있는 한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²²⁾

보고서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명백한 정치적 행위다. 한국언론학회는 이렇듯 논란의 현실을 반드시 회피하지 않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수천만 원의 과제를 몇몇 학자들로 하여금 팀을 꾸려 수행하게 할 것이며,²³⁾ 그 최종 보고서는 당연히 언론학회 이름으로 발표한다.

21) 정확한 명칭은 ‘대통령 탄핵 관련 TV방송 내용분석 보고서’이다.

22) 『미디어오늘』 2004. 6. 17. ‘언론학회 탄핵보고서 파문’.

23) 앞서 〈표 2〉에서 보듯이, 한국언론학회는 이 과제 수행을 위해 대략 3천만 원을 쓴 것으로 결산서에서 밝히고 있다.

물론 학회는 특정 연구팀의 결과물이라고 거리를 둘 것이다. 하지만 외부 의뢰를 받은 프로젝트를 특정 팀에게 위임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 형식으로 의뢰자에게 전달한 중매 역할은 결코 기피할 수 없다. 그 과정에서 학회의 권위가 크게 발휘된 점도 배제하기 힘들다. 공영방송이 ‘공정성’의 원칙을 위배했고, 그것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으며,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았다는 판단을 언론학회가 공개적으로 표명한 셈이었다.

문제는 발언의 일관성이다. 이후 지속적으로 벌어진 훨씬 심대하게 드러난 TV보도의 편파성 문제, 공영방송 뉴스왜곡의 사태, 표현의 자유 탄압에 관해 언론학회는 물론이고 유관 학회들 모두가 그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았다. 권위 있는 학회로서 미디어 통제의 상황, 저널리즘 위축 등으로 대표되는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현실에 관해 그 어떤 공식적인 발언, 책임 있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지 않는다.²⁴⁾ 오히려 침묵으로써 부정한 현상을 묵인하고 관성적 세미나에 몰두하면서 비리의 권력을 방임한다. 외부로부터 용역을 받고는 정치적인 판단의 개입을 했지만, 오히려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입장에서 권력을 비판하며 여론을 대변해야 할 때에는 그 결정적인 책임성을 회피한다. 민주주의의 결정적인 위기상황에서, 학문공동체로서의 사회적 실천윤리를 결정적으로

24) 2012년 9월 ‘민주주의와 갈등: 저널리즘의 새 지평을 모색하다’라는 이름으로 한국 언론학회가 세미나를 기획한 게 고작이었다.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이 날의 행사를 학회는 다음과 같이 회원들에게 알린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언론은 양극화, 과편화 속에서 심대한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언론학회는 정치적 대립과 사회적 갈등, 소셜 미디어의 등장 등으로 유례없는 도전과 변화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저널리즘에 대해 진지한 성찰과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 언론 안팎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투쟁, 혼란 양상에 대한 해석과 평가,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구현 가능하고, 구현해야 하는 저널리즘의 가치와 언론인의 역할에 대한 모색, 역사 발전에 기반을 둔 미래 사회 공론장의 예측과 제시 등이 심도 있게 다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부인한다. 바로 이 차이가 결정적이다.

요컨대 학회는 현실참여를 거부한 게 아니었다. 선별적으로, 일관되지 않은 방식으로 참여했을 따름이다. 대형화한 학회, 호텔을 찾아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는 학회, 재벌 등으로부터 막대한 재정의 대부분을 조달받는 학회의 정치윤리성의 문제는 비단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민주정치를 외면하면서 정치·자본권력과 근친관계를 맺는다. 2008년 한국언론학회가 한국방송학회,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한국방송홍보학회와 함께 한 봄철 정기학술대회가 그 단적인 예다. 제주도의 한리조트에서 ‘소통과 융합, 그리고 축제’를 주제로 대규모 학술대회가 개최된다. ‘여론다양성 강화를 위한 신문지원 정책’, ‘방송 융합 환경에서의 지상파 관련 법·제도 정비방안’, ‘방송통신위원회 시대 방송의 공공성’ 등 무려 66개의 특별 세션과 기획세션, 자유주제 세션에서 총 15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보다 세밀하게 학회 역사에 부기해 놓을 필요가 있다. 신문들이 앞장서 행사를 홍보한다. “미디어 학자들과 방송·언론·광고 종사자 등 참석자 400여 명은 사회문화적 통합과 소통의 장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미디어환경 구축 방안, 미디어 연구자 간 학문적 소통, 학계와 방송통신업계 간 소통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현대 사회 미디어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논의한다.”²⁵⁾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방송협회회장, KBS 사장, SBS 사장 등 주요 방송과 통신업계 임원들이 총출동한다. 학술발표가 끝난 저녁에는 만찬이 열린다. 그 자리에 다름 아닌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참석한다. 그리고 그는 만찬 축사까지 한다. 충남대 김재영 교수의 말처럼 “바람은 매섭고 날씨는 차갑고 배는 허기진 탓에 현장의 주목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지만,²⁶⁾ 그의 발언 내용은 더욱 으스스했다.

25) 『매일경제』 2008. 4. 25. ‘노정권서 언론정책 논문도 실종’.

26) 『한겨레신문』 2008. 4. 29. ‘불온해 보이는 5공 청산 프레임’.

신재민 차관은 이명박 정권의 미디어정책 기조를 분명하게 밝힌다. 이를바 5공 잔재 청산, 미래적 관점, 종합적 접근의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언론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정책 발표다. “언론계에도 5공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는데 이제는 당근과 채찍을 통한 언론 길들이기가 아니라 선진국답게 정부언론 관계 정상화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으로 어떤 규제나 지원도 언론에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언론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하면서도,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 맞도록 언론도 미래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미디어계에 다양한 협안과 과제가 가로놓여 있는데 어느 한 문제만 풀려 해서는 해결되지 않는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책을 수립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인다.²⁷⁾ 1면 머리기사로 올린 『동아일보』를 비롯해 여러 신문들이 다투어 기사로 싣는다.

정권은 학회를 통해 자신의 통치구상을 그럴듯하게 포장해 업계와 대중에게 소개한다. 의제를 세팅하고 여론을 제조하고자 하는 프로파간다 공작에 학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반면 외부후원금을 받고 호텔로 외출한 학회들은 합석한 권력과 결코 건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유착된다. 대형화한 언론·방송·미디어 유관 학회가 결국 정치권력의 발언창구, 이데올로기 채널로 전락하고 만 셈이다. 신재민이 지난 정권 언론과 방송·미디어 정책을 주도한 권력의 핵심인물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반드시 기록에 남길 사건이다. 학회가 정권 홍보·소개 역까지 떠맡았다. 그러면서 바로 그 정권이 초래한 언론자유 파괴, 저널리즘 해체, 공영방송 불구화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함구했다. 이런 학회들이 어떻게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학회의 윤리성, 정치성, 실천성은 치명적으로 일그러진다.²⁸⁾

27) 『미디어오늘』 2008. 4. 25. ‘신재민 언론 지원 규제 개입 않겠다’. MBC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을 원한다면 공사 형태로 가서 광고를 줄이고 공공성을 강화하든지, 민영방송을 원한다면 확실하게 시장으로 가든지, 소유구조 선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6. 나가며: ‘학회는 무엇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가?’라는 성찰의 문제

학회는 그 자체 일정한 설립 목적과 운영 체계를 갖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회합체이면서, 그에 참여하는 개인에게는 학자로서의 자격과 연구자로서의 신분을 부여하는 일종의 존재론적 울타리가 된다. 학회에 참여하고 학회원이 된다는 것은 곧 본인이 학자로서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하고 그런 역할을 타인들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정체성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사실상 자동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학문을 하고 학자가 되는 것과 학회에 참여하고 학회원이 되는 것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활동들이다. 물론 개별적인 연구자로서 자기 학문의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고, 자신이 속한 대학이나 별도의 연구모임을 통해 자기 존재와 자기 정체성을 찾아갈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학회라는 제도화된 학문적 활동의 터, 공식화된 지적 교류의 울타리는 학자에게 존재의 일차적 거처가 된다.

학자에게 학회에 관한 사유와 성찰의 윤리, 문제제기의 철학이 무엇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이유다. 학회란 무엇인가? 왜 학자는 학술의 회의체, 학문의 공동체, 즉 학회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며 직접적으로 글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학자와 연구자인 바로 나에게 학회란 대체 무엇이며, 무엇이지 않으면 안 되는가? 왜 나는

28) 본인이 한국언론학회와의 결별을 결심한 것도 바로 사건적 체험 현장에서였다. 나름의 정치적 선택이었다. 오랫동안 여러 가지로 적극 참여한 학회에 나는 더 이상 참석하지 않았고 회비도 내지 않았으며, 결국 회원명부에서 자동적으로 제명되었다. 물론 이러한 이탈은 명백히 재미난 일이 아니다. 일정한 소외감, 우울함을 초래한다. 학회는 그 귀속성으로서 학자의 중대한 존재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여타 학회와의 중복성 때문에 상실감 혹은 거리감은 여전히 극복 가능하다. 내가 관심 있는 문화연구의 경우만 해도, 굳이 언론학회를 가지 않더라도 그 동향을 그리 어렵지 않게 읽어내고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인에게 이 글을 쓰라는 것은 매우 불편하면서도 의미 있는 제안으로 다가왔다.

학회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윤리적 책임을 짊어지며, 그래서 올바른 학회의 (재) 형성을 위해 정치적 간섭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왜 그것이 성실한 논문 작성으로서 충족될 수 없는, 심지어 사회 운동적인 참여로서도 면제되지 않는, ‘지식인’의 역무가 되는가? 정상적인 학회와 비정상적인 학회, 아름다움 학회와 추악한 학회, 선한 학회와 악한 학회를 왜 구별해야 하고 어떻게 변별할 것인가?

부르디외 (Bourdieu) 가 제안한, ‘자기 스스로의 세계를 객관화’(objectivizing one's own universe) 하는 ‘급진적 자기비판’(radical self-criticism)이 필요하다. 깊은 성찰, 공개적인 반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기 성찰의 철학적 에토스(ethos) 가 허약한 학회가 외부의 세계에 대해 정당한 발언권을 갖거나 올바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철학적 탐침의 양식, 자신이 속한 장에 대한 지속적 비판의 태도가 결여된 학회가 그 장 밖의 세계로부터 사회적인 권위나 윤리적인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음도 분명하다. 학회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내부로부터 제기 받는다. 학회의 신분에 관한 본원적인 시비다. 대형화한, 권세화한 언론·정보·미디어·커뮤니케이션 유관 학회, 내가 속해 있는 학회는 더 이상 냉정한 비판의 칼날을 피해갈 수 없다. 관료적 체질과 타성적 활동을 타기할 공통과제인 것이다.

해결할 수 없다는 냉소주의는 현상의 합리화에 불과하다. 실질적 비평, 지속적 반성, 대화적 성찰을 통한 변환의 요구를 기피할 수 없다. 학회는 우선 스스로를 관찰해야 한다. 이야기되지 않은 문제적 현실에 관해 지속적인 공론을 벌여야 한다. 논문 발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외부 후원 프로젝트들로 사실상 세미나·심포지엄이 채워지고 있는 현실, 외부후원금을 갖고 호텔을 출입하는 현실, 바로 그 후원금들로 운영예산의 대부분이 충족되고 있는 현실을 자체 조사하는 작업이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를 압살한 부당한 정치권력과 부정하게 사교하면서, 저널리즘의 죽음과 저널리스트들의 축출, 민주·정치적 광장의 폐쇄 현실에 관해 침묵해 온 역사를 반성하는 일이다. 오직

그러한 정직하고 용기 있는 실천을 통해 자율적 학문공동체로서의 기본 윤리를 되찾아갈 수 있다.

이 기본 윤리의 회복은, 결코 외부에 의해 강제될 수 없는, 학회 내부의 대화적 합리성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반성적 공론을 통해 해답을 찾아가야 한다. 이 에세이는 바로 그 발제의 목적으로 쓰였다. 문제제기의 부담을 용기 있는 몇몇 동료들이 먼저 짊어지기로 했고, 내가 그 역무를 분담하고자 한 것이다. 물론 많은 연구자들이 이런저런 것들에 관해 불쾌를 표하고 불편을 논해 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그러한 목소리는 크게 잦아들었고, 현실의 학회가 학회의 현실로서 받아들여지고 말았다. 본원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그에 대해 자답해 보려는 노력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스스로도 이런 질문이 과연 얼마나 본원적인 것인지에 관해 깊이 사유해본 적이 없었다. 학자로서 자신이 속한 학문의 세계에 관해 엄격해야 하는 윤리를 소홀히 했던 것이다. 그 실패를 지속·반복하면 안 된다.

학문공동체로서의 학회의 요체는 학자적 만남과 지적인 나눔에 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논문·텍스트들을 발표하고, 이를 기초로 집단적이고 상호적인 학문의 토론을 활성화시킨다. 그 학술적 교류·교제는 개인의 멤버십 확인에만 그치지 않고, 특정 전공 분야의 정체성 심화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지식의 생산과 지성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지식의 공유 효과를 낳는다. 이웃한 학회들과의 접합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그 교류의 선의는 학문의 장 바깥에 있는 영역들 무엇보다도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부문으로 확대된다. 그러기 위해, 학회는 우선 스스로의 모순현실과 정직하게 대면하고 자신이 처한 문제와 직면해야 한다. 학회운영의 책임윤리를 성찰의 거울을 통해 되찾아야 한다.

윤리적이고 정치적²⁹⁾인 학회만이 존립의 정당성을 갖는다. 발주 프

29) 여기서의 ‘정치적인 것’은 협의의 제도정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자신의 존재 조건

로젝트와 공모 세미나, 후원 심포지엄들을 대폭 철거한, 적정 규모로 운영되는 지적·학술적 실천체로의 변신. 내가 속한 학회가 바로 그런 독립적 지식공유의 포럼이자 자율적 지식교류의 무대가 되길 희망한다. 자본과 적대하고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비판적 지식생산과 지성적 담론 교류의 현장으로, 호텔로 외출하지 않는 연구자, 교수, 대학생 주체들의 자비 운영의 검소한 공동체로 변환하길 원한다. 지적인 교류로써 학자·연구자의 정체성을 찾고, 투명한 윤리성을 바탕으로 민주·정치의 사회현실에 참여하며 위축된 지식(인) 사회를 책임 있게 지켜나가는 자율적이고 윤리적이며 지성적인 학회로 말이다. 자기 성찰적인 사회, 그리하여 함께 해 자랑스럽고 행복한 공동체다. 이게 과연 망상이고 환상이라는 말인가?

에 대해 예리하게 성찰하고, 외부의 조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정당한 것과 진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따져보고 그 판단의 준거를 토론하며 그에 맞춰서 실체로 행동·실천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리킨다. 이견을 드러내고 차이를 확인하며 이를 통해 공동의 지점들을 모색하는 공개적인 토론의 활동, 커뮤니케이션의 실천을 가리킨다. 현실 모순에 대한 개입 의사를 전제하며, 사건 현장에의 관여 의지를 수반하는 집단책임의 문제다.

학회의 차원으로 돌아오면, 내부의 문제점들에 대해 정확하게 비판하고 성찰하고자 하는 공적인 면모, 사회현실에 대해 학자 개별적인 차원을 넘어 학회 차원에서 지성적이고 실천적으로 관여하고자 하는 노력, 이를 위해 학회 내부에 현실 문제를 치열하게 사유하고 고민할 수 있는 대의적 시공간을 확보해 내는 책임을 통해 확인될 수 있는 실천적 양상이다. 바로 이런 조건 실현의 집단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깊어지고자 하는 자세다. 그럼으로써 정치적으로 성숙한 학회는 내부적으로 매우 성찰적이면서 외부적으로 아주 비판적이다.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제도정치와 결탁한 학자의 활동, 학회의 활약 양상이 바로 이 정치적 공간에서 스캔들로 폭로된다. 부정한 것으로 고발당한다. 학회의 지성적 강도와 반성적 심도, 수행적 방향을 조건 짓는 측면에서, ‘정치적인 것’은 커뮤니케이션·미디어 분야는 물론이고 인문사회과학 학회의 필수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이 글을 내가 속한 학회의 반성적 풍속도로서 준비했으며, 여타 부문에서는 어떠한 성찰적 논의가 진행 중인지는 잘 모른다. 명백한 것은 대학과 지식인 그리고 학계, 학문의 공통된 위기 상황 속에서, 이러한 논의가 더욱 확장되고 심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회적이지 않은 지속적 대화의 사업으로서 말이다.

참고문헌

- 강명관(2013). 『침묵의 공장』. 서울: 천년의 상상.
- Arendt, H. (1958). *The Human Condition: Chicago &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Arendt, H. (2003). *Responsibility and Judgement*. New York: Schocken Books,
- Bourdieu, P. (1990). *The Logic of Practic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Bourdieu, P. & Wacquant, L. J. D. (1992). *An Invitation to Reflexive Sociolog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abinow, P. (1984) (ed.). *The Foucault Reader*. New York: Pantheon Books.

투고일자	2014년 4월 14일
심사일자	2014년 5월 8일
게재확정일자	2014년 5월 22일

Abstract

Reflective Summons of Actual Academic Associations, the Reality of Academic Associations

Gyu Chan Jeon

Professor, Dept. of Broadcasting,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This article is prepared as an answer to the serious and courageous attempt to reshape the condition, to reform the shape of the relevant academic associations. Through this, the author will try to summarize the historical mode of existence, actual way of operation of communication, journalism, media and information studies association in Korea. But this will be done in a style of critical essay based on private thought, subjective evaluation and fragmented data. The academic associations mentioned in this paper is only for the purpose of dealing with actual cases.

This article would not dare to be an systemic report, research on the issues of academic association in Korea. It would not claim to be an academic paper with satisfactory reliability or validity, either. It merely wants to be an introductory paper on the problematic of academic association from the particular, self-reflexive point of view. More precisely, the author will try to raise an issue about the work of academic association based on the experience of personal participation, observation and criticism. Thus certain aspects of academic associations will be exposed sharply and clearly. It is in this way purely a subject

report.

The following three facts and · or realities will be discussed: First, good-quality papers are not presented often; Second, many of events are filled by seminars and symposiums funded by outside sponsors; Third, a big portion of the budget of many of big associations come from the those outside sponsors. In additions, the paper points out, the existing associations do not actively relate themselves with the actualities of socio-political crisis harming the democracy of media, politics of communication. The author will investigate these issues in a hope of recovering the ethics of academic association as an autonomous, responsible society.

Key Words: Academic Association, Power, Public Sphere,
Reflection, Writings